

국무조정실

우110-760 /종로구 세종로77-6 정부중앙청사 1914호 /전화 734-8796 (행)2184 /전송 723-1966
 조사심의관실 심의관 박기종 과장 심오택 담당자 김동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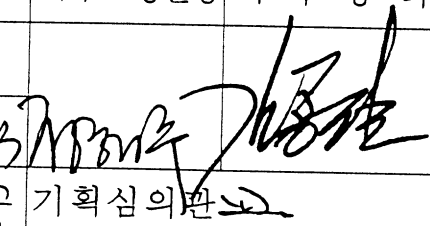

문서번호 국무심평12114-76

시행일자 '99. ~~10~~ 10

경유

수신 노동부장관

참조

보존기간		국무조정실장	국무총리
공개여부			
조정관	● 이재식	 기획심의관 	
심의관	김기종		
과장	심오택		
기안자	★김동구		
심사자	홍철	심사일	협조

제목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 개선(국무총리지시 99-28호)

1. 귀부 소관 업무인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('99.8.23~9.2)을 실시한 바, 보험료 산정기준 관련 업무혼선, 조사정산대상 사업장 선정의 신뢰성 미흡,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의 불합리, 산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 소홀 등 불임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.

2. 금번 현장점검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.

불임 : 산재보험료 정산실태 점검결과 1부. 끝.

국무총리

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정산실태점검 결과
(건설업종에 대한 정산실태 표본점검)

1999. 9.

국 무 조 정 실
(조사심의관실)

< 점 검 배 경 >

○ 노동부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

- 건설업체의 경우 총노임을 산출하는 규정이 모호한 점을 악용하여

- 사업주와의 담합, 보험료를 과소징수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수수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의하여 표본점검 실시

※ 점검대상 : 서울·경인·부산·광주지역본부, 서울중부지사

I. 현 황

1. 산재보험료 정산제도

○ 보험가입자(사업주)의 보험료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불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하였다고

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이 임금지급액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절차(산재보험법 제67조)

※ 보험료 산정방법 : 임금총액 × 업종별 보험요율

- 단, 건설업종의 경우 임금총액 불분명시 :

임금총액 = 총공사금액 × 노무비율(노동부 고시)

2. 운영현황

○ '95. 5. 1 노동부가 산재보험사업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
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공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

※ 공단현황 : 지역본부(6개소), 지사(40개소), 직원 1,258명

○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액 현황 ('98.12.31 기준)

단위 : 억원

징수목표	징수결정액	수납액	수납율	보상액	수지율
19,035	21,196	14,937	81.1%	14,658	98.1%

II. 점검결과 (문제점)

1.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개정고시된 보험료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 방치

○ 대형 건설업체 실무자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종전 방식에 의한 신고를 그대로 용인· 방치

- 개정방식을 적용하면 대형 건설사는 납부할 보험료 30~40%정도 증가 추정

→ 보험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보험료신고를 용인하므로써 공권력의 신뢰성 실추

※ 보험료 산정방식

· 종전 : 직접지불임금 + (외주비×노무비율) = 임금총액

· 개정 : 총공사금액×노무비율=임금총액

※ 총공사금액=기성액+지급받은 자재 시가 환산액

<각 지역별 보험료순 50위 사업장중 종전 방식에 의한 신고현황>

(금액 : 백만원)

구 분	'96		'97		'98	
	사업장수	미납추정액	사업장수	미납추정액	사업장수	미납추정액
계	76	43,476	66	55,673	53	36,583
서울지역본부	39	21,574	30	27,449	16	15,994
서울중부지사	37	21,902	36	28,224	37	20,589

2.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·지침으로 인한 보험료 징수의 혼란

< 임금총액 산출방법 >

$$[(\text{기성액} + \text{지급받은 자재시가환산액}) - (\text{중기사용료} + \text{설계비 등 산재보험료 이중납부 가능성 있는 금액})] \times \text{노무비율} = \text{임금총액}$$

- 지급받은 자재시가환산액 파악 곤란 (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)
 - 종전 방식에 의한 신고가 대다수로 지급받은 자재시가환산액을 불가산 (서울지역본부, 중부지사)
 - 대부분의 조사사업장은 관급공사를 주로한 건설회사로서 지급받은 자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51개사업장 전체가 지급받은 자재가산액 부재 (광주지역본부)
- 총공사금액에서 차감항목인 중기사용료, 설계비용 등 산재보험료 2중부담액 파악 곤란 ('98.2.6자 공단본부 시행지침)
 - 각 지역 공히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회사제시금액을 그대로 용인

○ 총공사금액의 개념을 기성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('98.2.6지침)

- 대부분 지역에서 총공사원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등 혼선초래

· '98정산실사분 중 3건을 표본조사한 결과
과소징수 1건 227백만원 (서울중부지사)

· '98정산실사분 중 7건을 표본조사한 결과
과소징수 2건 20백만원 과다징수 3건 62백만원 (부산지역본부)

· '98정산실사분 51건을 표본조사한 결과
과소징수 12건 322백만원 과다징수 7건 194백만원 (광주지역본부)

3. 조사정산 대상사업장 임의 선정

○ 조사정산사업장 선정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실무자의 임의적인 선정이 일반화되어 있음

※ 조사정산 대상사업장 선정기준

- ①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
- ② 반환 또는 충당금액이 발생한 사업장
- ③ 확정보험료 신고액과 수집한 자료에 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업장
- ④ 신고서상 임금총액이 불분명하거나 기타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
-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총사업장 17,823개 중 환급·충당발생 사업장은 60%정도(10,200개)이나 조사대상사업장은 1%(168개)임
- 광주지역본부의 경우 '96~'99(4년간) 전체 조사대상의 51%를 건설업종 선정

< 광주지역본부 건설업종 선정현황 >

구 분	계	'96	'97	'98	'99
전체사업장수	440	100	120	120	100
건설업종	226	58	65	55	48

- 광주지역본부의 경우 특별한 불성실험의가 없는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에 계속 선정

< 광주지역본부 2회이상 조사사업장 현황 >

('96 ~ '99상반기)

구 분	4회(2개소)	3회(10개소)	2회(12개소)
총보험료대비 추징율	1.9%	0.87%	1.1%

4. 조사대상선정과 조사를 한사람이 담당함으로써 사업자와
결탁가능성 농후(각지역 공통)

5. 정산조사 사업장 과다선정

- 서울, 부산지역본부 및 서울중부지사의 경우 정산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도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음

< 조사정산계획 및 실시현황 >

('96~'98)

구 분	조사대상선정	실제조사	미 실시	실사율
서울지역본부	1,136개소	560개소	576개소	49%
서울중부지사	993	605	388	61%
부산지역본부	603	459	144	76%

- 경인, 광주지역본부는 정산조사 대상사업장을 지나치게 과다선정함으로써
 - 정산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회사제시 금액을 그대로 용인

< 산재보험료 조사업무 역량분석 >

구 분	조사담당 인원	적정조사 사업장수	연도별 조사대상현황		
			'96	'97	'98
경인지역본부	11명	46	211	535	119
광주지역본부	12명	50	100	120	120

※ 조사정산업무는 징수부직원의 업무중 20%정도 비중이며 2인1조의 연간 적정조사 사업장수는 약10개 내외임

6. 정산조사 업무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음

-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업무는 관리자 및 감독기관의 통제가 필수적임에도
 - 연간계획만을 수립하여 담당자에게 일임 (각 지역본부 및 지사 공통)

7. 조사정산 대상기간의 임의적 결정

-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정산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
 - 보험료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로 통상 1~3년중 담당자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선정하고 있었음 (각 지역본부 및 지사 공통)

8. 산업재해보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

- 노동부장관은 제도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거의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됨
- 복지공단본부에서는 2년주기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
 -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상이한 기준적용으로 인한 과소·과다징수 등 업무상 혼선과 제도상, 관행상의 문제점은 방치되고 있음

Ⅲ. 점검결과 종합

1. 관계자 여론

- 산재보험 징수업무는 담당자의 자의적 처리가 만연되어 있고, 종사자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실하여 부조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여론

2. 근로복지공단 직원충원에 노동부직원 대거 지원

- '99. 10. 1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업무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313명을 충원할 예정이나 노동부직원 2,800명중 742명 (27%)이 지원하였음
-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사기저하와 함께 노동부에 비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무조건과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됨

3.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첩보내용 확인

- 금번 점검결과 직접적인 금품수수행위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나
- 건설업종정산시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모호한 규정, 원칙없는 집행, 관리감독자들의 방치 등의 실태를 통하여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

IV: 개선방향

1. 건설업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 개선

-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
- 실무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·지침의 정비
- 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

2. 보험료 과소징수 사례 등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

3. 산재보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 강화방안 마련